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의 원칙부터”

심상정 정개혁특위 위원장 “현 체제는 대표성에 많은 한계 있어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 지역주의 해소 위해 권역별은 필요…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중요 변수”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5200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당내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민주당과 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이나 국회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 불신 앞에서 맞바람을 피하고 등 뒤에 서보겠다는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연동형 적용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가 과감한 국회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논의를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한다”고 목적을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대 1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2대 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대 1의 원칙으로 해서 미세조정 범위 내에 논의가 이뤄질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권역별·연동형으로 선거제도 개

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언했다. 그는 “연동형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은 필요하다”며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위원장은 “현재 일부에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는 안

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 연동형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 논의 과정에서 병행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구체화하기 전에 국회 개혁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운영위 소관인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혁위 논의와 공감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지구 논의를 원칙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진성 기자



한·체코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한국시간) 프라하 한 호텔에서 인드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인드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는 체코의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국회는 29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장은 “용역 부분 예산을 없애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정책이나 입법조치로 이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혁신 자문위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면서 “국회는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연말에 50%로 대폭 삭감되면 해당 단체를 없애는 소리와 비슷해서 일단 16%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자문위에서 지적한만큼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기존 편성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은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정수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정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에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뉴스1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심신미약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 감경 조항 삭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도 의결

‘예산국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상향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 투표 전 토론에서 “윤창호법의 근본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는 것”이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취소 기준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낮추고,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할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 등도 통과

이밖에 전매제한 금지규정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등 건강관리법 국가·지자체가 지원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민생·현안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Lohas 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디밭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C, 한 여름 평균 기온 24°C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령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궈냈습니다!

맛도 영양도 품질도 으뜸 무주반디밭 농·특산물

판매처 | 무주반디밭사이버장터 www.mj1614.com 무주군 직영 063)322-0278 / 320-2770 / 080-055-0027

발행처 무주군청 | 발행인 무주군수 | 편집인 기희정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97 | 전화 063-322-2223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vs 김학용’ 구도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나경원(4선) 의원과 김학용(3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복당파를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거론돼온 강석호 의원이 29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김학용 의원과 보수 대통합·대여부쟁·품격정치라는 대명제를 놓고 정견과 지혜를 모아본 결과, 현시점에서 저보다 김 의원이 더욱 잘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 중에서는 나경원·유기준(4선)·유재중(3선)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여온 나 의원이 친박계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친박·잔류파 후보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1

문 대통령 지지율 48.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50%대 벽이 깨지며 48.8%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평균 국정지지도 50%인 9월4주차 주간집계(긍정 65.3%, 부정 30.3%)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그동안 지지율은 16.5%p가 빠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6~28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공개한 11월4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8%가 문 대통령에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고용 및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이어지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며 이같은 낙폭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 등으로 인한 여당 내 지지부 분열도 이번 하락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1